

은행 '공모형 신탁'도 판매금지?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다 태우나

12일 DLF 대책 최종안 발표 촉박

'전면 금지' '일부 허용' 최대 쟁점 은행,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제시 은성수 "큰 틀에선 변화 없을 것"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책방안을 최종 발표한다. 투자위험이 높은 고난도 신탁상품도 은행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련 대책이 신탁과 사모펀드의 유사성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장치라고 강조하고 있어 큰 틀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12일 오전 8시 은행장들과 만나 DLF 관련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최종안을 내놓

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2주간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개선방안에 따르면 원금손실이 20~30% 이상 날 수 있는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하고,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판매를 금지한다. 또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최종안에서 최대 쟁점사항은 원금손실(20~30%)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신탁' 상품의 은행판매 허용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은 고객의 돈을 비롯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은행에 맡기면 보수를 받고 운용·관리해 주는 상

품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신탁은 특정개인에게 판매된다는 이유로 신탁을 사모의 범주로 해석했다. 때문에 고난도 사모펀드를 차단한 것처럼 원금손실이 20~30% 이상인 투자위험이 높은 고난도 신탁도 은행서 금지했다.

그러나 은행은 공모형 추가연계신탁(ELT)은 금지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년간 ELT를 판매했지만 원금손실이 난 적이 없는데다, 사실상 이미 공모펀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고 있어 판매금지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에서 신탁형태로 판매된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의 규모는 42조8617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약 40%에 해당한다. 신탁형태로 판매한 ELT를 사모로 보면 약 42조 원이 넘는 신탁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다만 금융당국은 신탁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면 은행이 이를 사모펀드 판매 제한을 피하는 통로로 이동할 수 있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모형 증권을 닮았다고 해서 공모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은행 측의 건의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방안에 고난도 신탁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될지 아니면 일정 수준까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금융위와 의견 조율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신탁은 사실상 사모라고 하는데,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할 수 있다면 공모신탁을 장려하고 싶다"며 "은행과 소통을 통해 타협점은 찾되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분쟁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는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앞둔 국회. /연합뉴스

예산안·신속처리안 등 오늘 일괄상정

문화상 의장 본회의 열고 처리 강행범여권, 최종 단일안 마련위해 조율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변수로

정치권은 9일 문화상 국회의장이 통제한 예산안·신속처리안·민생법안 본회의 상정·표결 날을 맞았다. 협치와 냉전 사이에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운명의 기로에 섰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는 ▲내년도 예산안 ▲'신속처리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단일안,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등이 표결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6일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폐'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가 무산하자 9~1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10일은 20대 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 정기회다.

자유한국당을 뺀 범여권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한신당) 협의체'는 주말인 7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갔다.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조율하고, 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예산안과 관련해선 전혜철(민주당)·채이배(바른미래)·이정미(정의당)·박주현(평화당)·장병완(대한신당) 의원이 실무 협의에 나섰다. 이들은 휴일인 8일 오전까지 수정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 기획재정부가 국회가 수정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다. 정부가 내용을 정리하려면 통상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기회 본회의가 다음날 오후 2시부터 열린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범여권은 신속처리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사법제도 개편안 5건에 대해서도 최종 단일안 마련에 나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2건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막판 변수는 본회의에 앞서 나올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 제1야당 원내 지휘봉을 누가 잡느냐다.

새 협상 상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국 분위기가 바뀔 전망이다. 현재 차기 원내 사령탑에 도전한 현역은 심재철(5선)·유기준(4선)·강석호(3선)·김선동(재선) 의원이다. /빅스타 기자 bigstar@

'삼성 미래기술육성' 연구 결실 글로벌 과학계 10대 업적 꼽혀

초전도 자석
직류 자기장

한승용 서울대 교수 연구팀
'직류 자기장 세계기록' 포함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이 또 한번 전 세계 과학계를 흔들어 놓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저널 피직스 월드는 '올해 과학계의 획기적인 10대 업적'에 서울대학교 한승용 교수의 '직류 자기장 세계 기록'을 포함했다.

올해 공개된 논문 수백건 가운데 중대한 진전을 이뤘거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중대한 성과를 거둔 10건 중 하나에 포함된 것이다. 5명의 정예 에디터들로 구성된 선정단이 직접 추려냈다.

한승용 교수팀은 직류 자기장 45.5테슬라(Tesla)를 지난 20여년간 넘지 못했던 기존 세계 최고기록을 경신하면서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바 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암 진단용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신약개발용 분석 장비 등 의료 분야와 풍력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여러 분야에서 활

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암 진단용 MRI의 경우 해상도를 100배 높일 수 있다. 앞서 연구팀은 기존 초전도 자석에서 필수 요서였던 전기 절연부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무절연 고온 초전도 자석' 구조를 세계 최초로 제안한 바 있다. 초전도 자석 제작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과제로 선정됐으며, 미국국립과학재단 지원도 받았다. /김재용 기자 juk@

"체질개선 위해 구조조정 지속 전망"

>> 1면 '간적없는 역성장 시대'서 계속

대대적인 세대교체 등 새바람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돌입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연말 정기 인사에서 전체 임원 65명 중 13명에게 퇴사를 통보해 임원 20%를 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 수가 2016년 124명에서, 3년 만에 절반 아래인 52명으로 줄어들었다. 두산중공업은 임원 추가 감축에 앞서 올해 전 직원 6000여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2400여명에 대해 순환 휴직을 실시했고, 250여명은 관계사로 전출시키는 등 경영 위기 극복 노력을 해왔다.

유통업계도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CJ는 지주사 인력 440명 가운데 절반을 계열사로 내려보내 현장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CJ그룹 영업이익률은 2017년 7% 수준에서 최근에는 3%까지 떨어진 상태다.

롯데는 지난 10월 30일 국내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비상경영을 공식화했다. 롯데는 올해에만 4개의 백화점(인천점·대구영플라자·안양점·부평점)과 1개의 대형마트(덕진점), 그리고 1개의 아울렛(롯데팩토리아울렛 인천점)을 폐점하는 등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국내 대형마트 1위 신세계그룹도 최근 정기인사를 통해 임원 11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항공업계도 원화 약세에서 비롯된 환율 변동과 글로벌 경기 둔화, 일본 여행 자제 운동 등 악재가 겹치며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항공업계는 생존

을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올해 창립 50년주년을 맞은 대한항공은 실적 악화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향후 구조조정 강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중심의 항공산업에 주력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듯, 대한항공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지난 10월부터 3개월 순환 무급 휴직을 시행하는 등 긴축 경영에 돌입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 생존을 위해 주력 계열사의 부진을 타계하기 위해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태"라며 "기업에 맞는 체질 개선을 위해 당분간 구조조정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말 임원 인사에서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진행하는 만큼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